

# 역대급 저평가 韓증시에 ‘경협 봄바람’, 변수는 금리역전

(韓-美간)

## 하반기 증시전망

북미회담·금리인상·월드컵 등 이슈  
위험 美 금리인상 증시 상승폭 제한  
기회 ‘중전선언’ 등 남북관계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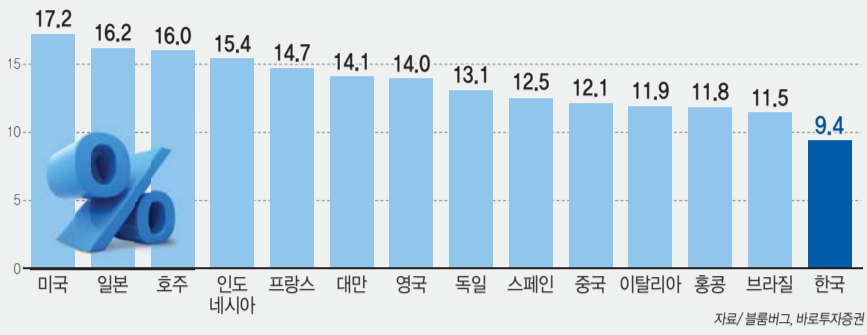
최근 남북 관계 개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기대감으로 하반기 증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이달 금리 인상이 확실해지면서 위험요인도 있다.

이에 따라 증시전문가들은 코스피지수 상승이 제한된 박스권에서 당분간 횡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는 주가 상승의 기회지만 미국의 금리인상, 꺾이는 경기개선세 등이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미래를 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2400선을 간신히 지키고 있다.

### ◆기회요인…남북관계 개선

현재 국내 증시는 역대급으로 저평가

주요 국가의 주가수익비율 현황 단위: 배



된 상태다.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은 9.4배다. 이는 미국(17.2배), 일본(16.2배)의 주요 지수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흔히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은 ▲ 낮은 배당성향 ▲ 불투명한 지배구조 ▲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꼽힌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배당성향(순이익에서 배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대만(61%), 미국(5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제 하나의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바로 남북 관계 개선에 따

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특히 오는 12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전선언’까지 나오게 된다면 이는 국내 증시 매력도를 한 단계 더 올릴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민 바로투자증권 연구원은 “한반도 평화 체제가 긍정적으로 이뤄진다면 전쟁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코스피지수의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면서 “실제로 남북 평화무드가 지속됐던 2004~2007년, 코스피지수의 PER은 다른 해보다 높았던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대감은 외국인 자금 유입으

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외국인인 코스닥에서 5348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14년 만에 최대 순매수세를 기록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 보유 잔고는 108조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다만 과거 1993년 북한이 핵 사찰 수용 합의 이후 북미 핵 합의문이 제네바에서 체결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북미회담 이슈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위험요인…한미 기준금리 역전

문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다. 오는 12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금리를 1.75~2.00%로 0.25%포인트(p) 올린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다. 인상이 단행되면 지난 3월 역전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0.5%포인트로 더 벌어지게 된다.

지난 2005년 한·미 금리차가 50bp(1bp=0.01%p)로 벌어졌을 때 외국인 투자금은 월 평균 9000억원씩 빠져나갔다. 국내 유입 외국인 투자자금의 급격한 이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기준금리를 함께 인상할 수도 없다. 올해 3%대 경제성장률 전망도 힘을 잃고 있고, 상장사들의 영업이익 개선세도 1분기부터 한 풀 꺾였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올 1분기 상장사 544곳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96% 늘었지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오히려 6.4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행 중 다행은 이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마지막 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상황만 보면 내차례 금리 인상도 무리가 아니지만 터키, 브라질 등 신흥국 금융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이탈리아 위기설까지 들고 있어 유럽중앙은행(ECB)도 예정대로 9월에 양적완화를 종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많다.

김예은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지수는 상단과 하단이 제한된 새로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라며 “산재된 리스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지금은 보수적인 전략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불고기 최고” 베트남 K푸드 행사 성황

9~10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 미딘경기장 광장에 마련한 K푸드 홍보 행사장에 현지인이 대거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 “올 韓 성장률 전망치 2.8% 유지”

### 현대경제연구원

#### “후퇴에서 침체 국면 진입”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유지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의 전망치였던 2.8%로 다시 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연구원의 전망치는 정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이상 3.0%),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2.9%)보다 낮고 한국금융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이상 2.8%)과 같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최근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1년여 동안 하락하는 점, 산업생산이 재고투자와 기존 건설투자 물량에 의존하며 취약하게 진행되는 점, 고용이 부진한 점에 비춰 현재 경기가 ‘후퇴’에서 ‘침체’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실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구원은 “하강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2.8%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7%로, 3월 전망(2.6%)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소득주도 정책에 따른 가계 실질소득 증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완화에 따른 관광객 유입 확대 가능성이 민간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둔화에 따른 고용 여건 악화,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은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3월 0.9%에서 이번엔 0.6%로 낮춰 잡았다. 건설수주와 같은 건설 경기 선행지표 부진이 지속하고 하반기 보유세 개편안 발표 등 부동산 시장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해섰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은 3.9%로 3개월 전보다 0.6%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국내 기계 수주와 같은 선행지표들이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설비투자

증가세를 이끌어온 반도체 투자 증가세가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6.2% 늘 것으로 전망했다. 3월 전망(5.9%)보다 확대됐지만 지난해 실적(15.8%)에 비해 크게 꺾일 수 있다.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부 신흥국 경기 위축 등 여파 탓이다.

연구원이 전망한 올해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9만8000명이다. 이는 지난해 실적(31만6000명)의 3분의 2 수준이다.

실업률은 3.8%로 작년보다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연구원은 “우리 경제 활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양호한 세계 경제와 동떨어진 내수 불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 “경기 흐름에 따라 추가적인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고려하고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투자·시장 진출·출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 발굴을 통해 경제의 고용 창출력 확대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양성운 기자 ysw@

## 이차전지 부품 ‘니켈’ 3년 후 가격 16% ↑

### 한국광물자원공사 전망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니켈의 소재 가격이 3년 뒤 약 16%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한국광물자원공사 자원정보포커스에 따르면 2021년 1·4분기 예상 니켈 국제 시세는 1t당 1만7759달러(약 1912만원)일 것으로 예상됐다. 8월 현재 런던금속거래소(LME) 기준 니켈 국제 거래 가격은 1t당 1만5240달러(약 1641만원)다.

니켈은 전기차용 이차전지 양극 소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자동차용으로 사용되는 이차전지는 대부분 니켈·코발트·망간 또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으로 구성된 양극재를 사용한다.

이 가운데 니켈은 이차전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비중을 높이려고 연구 중인 소재다. 이차전지 에너지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하고 몇 년 새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코발트의 비중을 니켈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7월 LME 기준 코발트 국제 거래 가격은 1t당 9만3696달러(약 1억92만원)로 니켈보다 5배 이상 비싸다.

광물공사는 미국과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니켈 거래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은 니켈 외에도 구리 등 주요 산업재에 대한 투기 수요가 발생해 비철금속 가격을 높이는 원인이 된다.

2018년도 전체 예상 니켈 수급은 정련 니켈 예상 소비량 226만t·예상 공급량 218만4000t으로 공급량이 7만6000t 부족할 전망이다. 그러나 LME의 니켈 재고량이 다른 소재에 비해 많아 공급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6월5일 기준 LME 니켈 재고량은 28만7000t이다.

자원공사가 예상하는 올해 3·4분기와 4·4분기 니켈 평균 가격은 각각 1t당 1만4729달러(약 1586만원)와 1만5305달러(약 1648만원)다.

공급 측면에서는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4월6일 미 정부는 크림반도 병합·시리아 정부군 지원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러시아에 관료 17명·신용채널 7명과 이들이 소유한 기업 12곳에 대한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 기업 가운데 루살(RUSAL)은 세계 2위 니켈 생산업체 노릴스크 니켈(Norilsk Nickel)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러시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예상됐다.

/박찬길 기자 cgr@

## FIU, 자금세탁방지 TF 구성

###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모색 중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FIU는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중회의실에서 ‘자금세탁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가한 김근익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 관계전문가 등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와 관련된 FATF(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 동향과 미국 제재 등 최근의 여

건 변화를 공유해 FIU의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FIU에 따르면 최근 FATF 상호평가는 미국 금융당국의 현지점포 제재 등 자금세탁방지 체계 개선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높아지면서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에 FIU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국제정합성을 제고하고 반부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기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FIU는 자금세탁방지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업종에 대한 의무부과 검토 등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

다. 또 범부처 차원에서 상호평가 수검자료 및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현지실사에 대비한 TF 구성 등 시·기별 추가적인 대응 방안 추진한다.

이러한 추진방안은 2019년 상반기에 서면평가를, 하반기에 곧바로 현지실사를 진행해 2020년 초에는 FATF 총회에서 결과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를 실질적·세부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평가·감독정책방향-검사-교육(개선)’이 연계·순환되는 체계로 개편하고, 전략분석 기능 강화, 법집행 기관과의 정보공유 확대, 금융회사의 STR(의심거래보고) 품질제고 등 심사분석 효율화 방안도 추진된다.

/유재희 기자 ryusou@1@